

당정 “개인정보 유출 기업, 과실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

당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현행법상 고의 또는 과실요건 삭제
“제재뿐 아니라 피해구제 실재화”

국회 정부위원회와 개인정보위원회가 4일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상혁 민주당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은 “당정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엄정한 제재뿐 아니라 피해구제를 실재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현행법상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삭제해서 기업들이 유출에 대해 전반적인 입증 책임을 지도록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당정의 설명이다.

양청산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처리자 유출 사고 발생 시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선언하고 예외 사유를 규정하는 형식으로 법정을 바꿨다”며 “처리자가 의무를 다 수행하거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유출 사고 책임이 없음을 모두 입증하면 면책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해서 손해배상 사업자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박 사회수석부의장은 “다크웹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통돼 범죄피해 등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유출된 정보임을 알면서 거래할 경우 형벌 규정을 신설해 불법 유통을 근절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기업 등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조사를 통해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시행명령을 강제 불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증거보전 명령 도입,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정기 실태점검 등을 하기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긴급 보호조치 명령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정부에서 신속한 입법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고,

당은 입법사항이 차질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부연했다.

회의를 주재한 한정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SK텔레콤, 쿠팡,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들께서 느끼는 불안과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며 “찾아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할 법과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는 개인이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국민 일상 속 프라이버시 보호도 중요한 과제다.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 방지, 일상 속 스마트 기기의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 등 개인들이 체감하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구윤철 “농업 부문 ‘AI 대전환’ 2900억 투입”

연내 민간 출자 농업회사법인 설립
공공조달 통한 AI 산업 활성화 선도

농업 부문의 ‘인공지능 대전환’에 공공과 민간에서 출자한 자본 총 2900억 원이 투입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농업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는 ‘농업 AX 플랫폼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기후 위기, 인력 부족과 같은 우리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농업 분야에 AI를 적용해 AX 플랫폼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2900억 원(공공 49% 이하, 민간 51% 이상) 이상을 출자해 농업회사법인(SPC)을 연내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또 “AI를 활용해 자동으로 최적의 생육환경을 관리하고 병충해와 질병을 진단하는 농·축산 AI 솔루션을 개발해 농가에 제공하겠다”며 “이를 통해 고령 농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민과 초보 농업인 누구나 전문적으로 스마트팜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한국의 스마트팜 모델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차세대 스마트 온실 및 축사 개발 등을 추진한다. 이번 추진 방안은 현재 스마트농업이 시설·장비 보급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생산

자의 숙련도와 판단에 크게 의존하는 현행 스마트농업 구조가 고령농·초보농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생산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농어촌공사를 통해 공공 출자자로 참여하고, 민간에서는 앵커기업을 비롯해 농업인·농업경영체, 농식품기업, 지방정부 등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 선도 방안도 제시됐다.

구 부총리는 “AI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대폭 확대해 혁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수요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 “AI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시장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입찰과 계약 과정에서 가점 등 우대조건을 부여하겠다”며 “혁신제품 평가 시에는 ‘AI 전용 트랙’을 신설하는 등 AI 제품이 공공에 신속하고 쉽게 유입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李 대통령, 설 명절 선물 ‘집밥 세트’ 준비

靑 “‘일상 회복’ 국정방향 반영”

이재명 대통령이 설 명절 선물로 ‘그릇·수저 세트’와 ‘집밥 재료’가 포함된 ‘집밥 세트’를 준비했다. 따뜻한 집밥을 연상시키는 선물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설 선물을 각계각층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설 선물은 ‘그릇·수저 세트’와 ‘집밥 재료’로 구성됐다. 밥이나 국 등을 담을 수 있는 흰 도자기 그릇의 뚜껑에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새겨졌으며, 집밥 재료로는 쌀·간장·표고채·매생이·떡국떡·현미·찰수수·찰기장이 담겼다. 각 재료에는 수도권·중부권·동남권·대구경북·호남·전북·강원·제주 등이 재명 정부의 공약인 ‘5극 3특’의 상징성을 담았다. 국정 2년차를 맞아 국민통합



이재명 대통령이 설 명절 선물로 ‘그릇·수저 세트’와 ‘집밥 재료’가 포함된 ‘집밥 세트’를 준비했다. /청와대

과 지역 균형 성장, 모두가 체감하는 일상 회복이라는 국정 방향을 이번 선물에 반영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동봉한 카드를 통해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상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며 “내일은 오늘보다 나를 것이라는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삶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치열하게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진 기자 syj@

LG엔솔-한화큐셀, 북미 에너지사업 파트너십 강화

1조 규모 ESS배터리 공급 계약

LG에너지솔루션이 한화큐셀 미국 법인에 1조원대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를 공급하며 북미 전력망 시장에서 대형 수주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한화큐셀 미국법인과 총 5GWh(기가와트시) 규모의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공급 제품은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에서 생산되는 ESS용 리튬인

산철(LFP) 배터리로,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납품돼 한화큐셀의 미국 내 전력망 ESS 프로젝트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5월 체결한 4.8GWh 규모의 ESS 공급 계약에 이은 두 번째 성과다. 첫 계약을 통해 검증된 제품 경쟁력과 현지 생산 역량이 추가 수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계약 규모와 협력 범위가 확대되면서 양사 간 장기파트너십도 한층 강화됐다.

양사는 미국에 구축한 생산 거점을 기

반으로 배터리와 태양광 모듈을 연계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재홍 LG에너지솔루션 버텍스 법인은 “프로젝트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한화큐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차별적 가치를 기반으로 장기적 파트너십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사가 함께 추진하는 프로젝트들이 고객 사업의 장기적 성공과 미국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류진 회장 “과감한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

〈한국경제인협회〉

》 1면 ‘후 “중기·지방·청년”서 계속

또 한중 정상회담 당시 기업들이 협조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며 정상외교를 통해 국제 민간 경제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진에게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국가, 필요로 하는 의제를 중심으로 정상외교 일정을 수립해달라고 지시해놨다”며 “경제단체나 개별 기업 입장에서 어떤 아이템의 어떤 국가가 어떤 시기에 (가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순방 일정에 고려하고, 순방 행사 내용도 그 중심으로 재편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비롯해 한화그룹·롯데그룹·포스코그룹·HD현대·GS그룹·한진그룹 총수 또는 경영진이 참석했다. 또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류진 회장은 10개 그룹이 5년간 약 270조원 규모의 지방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회장은 “과감한 투자로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고 소외된 지역 청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겠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